

중국 물류 리포트

CHINA LOGISTICS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國 上海市 長寧區 遵義路 100號 虹橋上海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14-4호

2014년 3월 18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GOP)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해양 분야 주요 이슈 및 전망

▶ 중국 물류 동향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 현황

(억 위안, %)

구 분	생산액	증가율
해양생산총액	54,313	7.6
해양공공부분*	9,288	7.3
해양연관산업	22,344	8.0
주요 해양산업	22,681	6.7
해양관광업	7,851	11.7
해양교통운송업	5,111	4.6
해양어업	3,872	5.5
해양공정건설업	1,680	9.4
해양석유·가스	1,648	0.1
해양조선업	1,183	-7.7
해양화학공업	908	11.4
해양생물의약품	224	20.7
해양전력업	87	11.9
해양염업	56	-8.1
해양광업	49	13.7
해수이용업	12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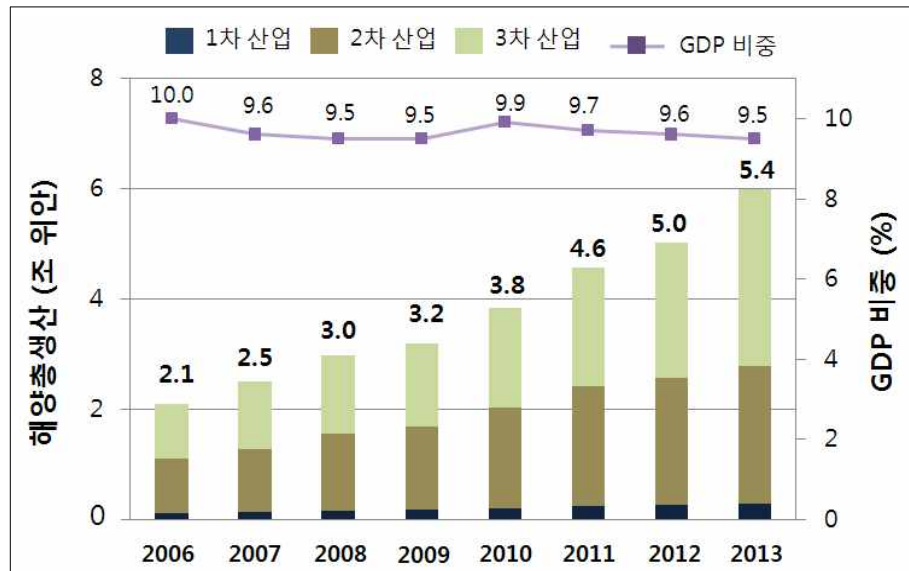
주: 해양공공부분*은 해양의 개발 이용과 보호에 따른 과학연구, 교육, 관리 및 서비스 활동.

자료: 国家海洋局, 「2013年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 2014.03.

중국물류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물류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GOP)



자료: 国家海洋局, 「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 2006~2013년 각 년호; KMI 작성.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 전년대비 7.6% 증가, 조선업·염업 생산액 감소

2013년 중국의 해양총생산(GOP: Gross Ocean Product)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5조 4,313억 위안을 기록했고, 중국 전체 GDP의 9.5%를 차지했다. 2013년 중국 주요 해양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2조 2,681억 위안으로, 해양관광업이 7,851억 위안으로 가장 높았고, 해양교통운수업 5,111억 위안, 해양어업 3,872억 위안, 해양공정건설업 1,680억 위안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13년 지속된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해양조선업 생산액은 2012년에 이어 다시 마이너스 증가율(-7.7%)을 보였고, 해양염업 생산액도 역시 기상 요인과 소금 수입량의 증가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해양생물의약품 생산액은 전년대비 20.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3월 5일 2014년 중국 “양회(两会)”에서 진행된 리커창 총리의 2014년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국가해양권의 보호, 해양강국 건설”이 재차 강조되었고, “양회”기간 중에도 “국가해양발전 전략” 및 “중국해양일” 제정, 해양조사선대 구축 등 해양관련 제안들이 많이 나와 중국 지도부의 해양권의 보호 및 해양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GOP)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해양 분야 주요 이슈 및 전망
- ▶ 중국 물류 동향

저자 소개

마광(马光) 절강대학교 교수



연구 분야

국제법 및 WTO법

주요 활동

절강대학교 아시아법센터 부주임,
중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절강성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회 이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등

중국 물류포커스 : 2014년 중국 해양 분야 주요 이슈 및 전망

1. 2013년 중국 해양 이슈문제 회고

2013년은 국가해양사업 발전 '12·5' 계획을 필두로, 북극이사회 장관회의에서 정식 옵서버 자격(북극 개발 수행에 재정후원자, 지역협력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중국 해양경찰국이 정식 출범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난 2013년을 돌아보면서 선정한 해양 부분 주요 8대 이슈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월, 「국가해양사업 발전 '12·5' 계획」을 발표했으며, 「12·5」기간 해양사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사상, 기본원칙 및 발전 목표를 확정했다. 둘째, 1월 17일,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저장성 저우산군도신구 발전계획」을 비준·발표하였는데, 계획은 중국 최초의 해양경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전략성 지역계획이다. 셋째, 1월 22일, 필리핀에서 남해분쟁에 대한 국제중재를 신청하였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거절했다. 넷째, 5월 15일, 북극이사회 장관회의에서는 중국 등 6개 국가의 이사회 정식 옵서버자격을 승인했다.

다섯째, 7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이 원칙적으로 통과되었으며, 방안에 근거하여 상하이자유무역구를 4개 기능구역으로 구분하고, 상하이외고교보세구, 상하이외고교보세물류원구, 상하이양산보세항구 및 상하이푸둥공항종합보세구 등 4개 특수감독·관리구역을 포함시켰다. 여섯째, 7월 22일, 국가해양국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 해양경찰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개편된 국가 해양국은 기존 국가해양국 및 국가해상감독부서,公安部 변방해경부서, 농업부 중국 어업행정부서, 해관총서의 해상감독경찰 등의 직책을 통합하여 편성되었다. 일곱째, 11월 26일, 중국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호'는 칭다오 군항에서 출항하여 최초로 남해까지 항해하여 근해역에서 시범운항 및 훈련을 진행했다. 여덟째, 12월 10일부터 3일간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대외개방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14년 중국 해양 이슈문제 전망

2014년에도 중국 해양을 둘러싼 이슈가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아래에서는 '2014년 전국해양공작회의(2014년 1월 16일, 베이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양전략계획 및 법제도', '해양경제', '해양통합관리', '국가해양권익', '극지 및 북극해' 등 5개 분야로 나눠 이슈를 전망하도록 한다.

(1) 해양전략계획 및 법제도

○ (해양 분야 '13·5'계획 준비) 「국가해양사업발전 '12·5'계획」, 「전국해양경제발전 '12·5'계획」과 관련해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전국 해양경제발전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해양사업발전 '13·5'계획」, 「전국해양경제발전 '13·5'계획」, 「극지고찰 '13·5'발전계획」 등 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축적할 방침이다. 그리고 해양사업「12·5」계획을 중간 평가하고, 「13·5」계획과 이행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GOP)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해양 분야 주요 이슈 및 전망
- ▶ 중국 물류 동향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01-03	03-14
종합지수	1,098.37	1,075.41
일본 향로	794.36	826.42
구주 향로	1,507.15	1,452.98
미서부 향로	976.03	995.23
미동부 향로	1,181.88	1,192.26
한국 향로	628.69	637.60

주 : '01-03'은 2014년 1월 3일 지수.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1-03	03-14
종합지수	1,238.94	1,171.54
석탄	1,302.33	1,273.08
곡물	1,215.94	941.17
금속광석	1,240.79	1,048.66
정유	1,229.50	1,229.50
원유	1,597.14	1,597.14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 (해양 입법사업 추진) 「해양기본법」, 「심해저지역 자원탐색개발법」, 「남극활동 관리조례」등 법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해양감찰제도」를 전면 실시해 해양행정관리 및 법집행 감독업무를 강화한다. 또한 해양 부분 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완비해 정부의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 (국가해양선대확대) 국가해양조사선대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극지 쇄빙선, 대양종합조사선, 유인잠수정 지원선, 해양과학선, 해양감찰선 건조를 확대한다. 또한 남극 신 과학기지, 국가 심해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20척의 해양경찰선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다. 성(省)급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 해상감독선, 연해어업행정선 및 규정을 위반한 어선을 차압·보관 장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법집행 업무와 관련해 장비와 시설을 최적화 관리하기 위한 표준 및 관리방안을 제정한다. 대형·특수형 행정선과 항공기를 추가 구매한다. 관련 기관 조직을 개편하고, 해상 법집행 및 관리를 강화한다.

(2) 해양경제

- (해양감독권 분권화 추진) 국가관리사업 중 해양이용 및 해저케이블파이프라인에 대한 감독관리, 매립사업 준공검수, 무인도서에 대한 임시사용 심사, 도서에 대한 대외투자 심사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방 혹은 분국에 이양한다.
- (해양경제 시장화 강화) 해양자원, 자산(资产) 및 자본(资本) 등 3위 1체의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정부가 해양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것을 대폭 축소한다. 해양자원 요소 유동의 체제메커니즘 병목을 해소하여 해양자원 요소시장의 전면발전을 촉진한다. 해역사용권, 무인도서 사용권을 민간에 경매하고, 해양이용 및 도서 사용권을 양도하는 등 구체적인 시장화 사업을 규범화한다.
해역물권, 재산권 교역 등 제도를 완비하고 해역사용권 양도, 저당, 임대 등을 규범화하고 시장중개를 담당하는 서비스기관을 양성한다. 해역 기준가격 평가를 진행하고 매립해역 사용액 징수 표준을 마련해 해역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생태가치, 시장수급 및 자원희소 정도를 고려한 유상사용제도를 구축한다. 해역, 무인도서 사용에 대한 등록증 발급 업무를 통일화하고, 등록정보조회서비스를 완비한다.
- (해양경제 발전 금융지원 정책 강화) 중국인민은행에서 시행하는 해역사용권에 대한 담보대출정책, 중국은행과 체결한 해양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 및 국가개발은행에서 발표한 해양경제발전에 관한 개발성 금융지원안 등을 결합한 해양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해양경제프로젝트뱅크를 구축한다. 해양과 관련된 금융, 보험, 대출 담당 기관이 해양산업 발전에 특화된 혁신적인 금융수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도서관리 및 지원 강화) 제2차 도서자원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시(市)급 이상 유인도서와, 개발 가능한 무인도서 등 2,810개 도서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성한다. 각급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서지역의 인프라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 투입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GOP)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해양 분야 주요 이슈 및
전망
- ▶ 중국 물류 동향

(3) 해양통합관리

- (해양과학기반 해역통합관리체계 구축) 건전한 해역종합관리·통제체계를 구축하고 4단계 해역 관측업무체계를 완비한다. 해역에 무인관측기지를 건설하고, 최신 공간 관측기술을 도입, 해저공간자원 관측을 통해 해저 3차원 감시 관측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중점 해역에 대해 관측 빈도를 높이고, 이슈 해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관측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해역 감시 및 관측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제도화하고, 해역자원 종합평가 및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 인프라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해양인프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과정을 감독 관리하며 해양이용 후 평가관측 제도에 대해 연구한다.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인공구조물 건설 및 사용 관리 제도를 구축한다. 도서 감시관측 자료수집 및 분석, 이를 응용하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 국가 도서 감시관측 시스템을 운영한다.

- (지역 해양기능별 구획) 해양자원 감독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건전한 해양자원 사용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연안에 위치한 지방 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이를 위해 해양기능구획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연안 보호·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별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첫째, 양식분야에서 양식해역사용관리정책을 완비해 해역을 통합관리하고, 보상 프로세스를 마련해 양식해역 점용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민에 대해서는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해양매립과 관련해서는 매립계획을 잘 세우고,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국가 중점 인프라시설, 산업적 이용, 민간 활용 분야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연해지역 배치를 제한한다. 해역사용 관리방법을 새로 정비하고 도서보호계획 실시에 대한 평가제도를 구축한다.

셋째, 도서관리와 관련, 지역별 도서사용계획관리 수립을 추진하고 법에 근거하여 도서관리를 강화한다. 도서 보호와 개발에 대한 참여를 장려해 역량을 집중시키며, 무인도서에 대한 집중관리와 생태개발 시범사업을 강화한다. 도서생태보호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도서생태건설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한다. 15~20개 도서생태실험기지를 선정·조성하여 도서 관련 담수공급, 에너지공급, 쓰레기오수처리 등 일련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해양생태계 보호) 국가 차원의 중요 생태보호 건설계획 수립·개정에 참여하고 국가의 생태보호계획 추진자금, 해역사용에 대한 이용료 등을 해양생태환경 관측 및 감시 플랫폼 건설에 확대 투입한다. 해양생태 복구를 위한 사회자본 투입유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해양보호구, 해변습지 등 중점 생태지역의 관측 감시를 강화하고 국가 빈하이습지관측센터 등 중점프로젝트와 공정건설을 추진하고 산둥성 펑라이(蓬萊) 19-3 유전 유출 사고에 따른 생태계 피해복구 작업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들 통해 성급 해양정비 및 해양생태복구를 위한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급 프로젝트 사업으로 통일 관리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GOP)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해양 분야 주요 이슈 및
전망
- ▶ 중국 물류 동향

○ (해양생태 민감지역 관리 강화) 국가주도보다 지역 차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생태기능을 구획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해양생태보호에 있어 중요하거나 해양생태 보호에 취약한 민감 분야를 확정한다. 성시급 해양생태 민감 분야를 확정하여 기술연구 및 응용시범을 추진하고 해양생태 민감 부분의 감독관리 조치를 구체화하여 발해만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양생태 민감제도 시행을 추진한다. 해양생태계 민감지역을 대상으로 해양플랜트 설치 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발해만 시범지역의 경험을 기반으로 연해 각 지역에 그 성과를 파급하여 해양환경 악화 추세를 억제한다.

○ (해양생태 손해제도 마련) 건전한 해양생태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 보상 방법을 연구하여 해양생태보상 시범지역을 추진하고 중점 해양생태기능구역에 대한 보상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해역과 육역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오염보상 및 배상체제를 구축하여 하천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배출 총량에 근거하여 육역의 오염물로 인해 해수가 오염되는 데 따른 보상배상 제도를 마련한다.

해양경제발전을 시범 추진 중인 성시의 폐쇄 및 반폐쇄 항만에 대해 오염총량관리 시범프로젝트를 전개하고, 발해 해양환경 육·해역 오염통합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발해 해역에서의 육상 오염물 해양 투입량과 배출감소량 목표를 행정구역에 근거하여 분배한다. 일정 지역을 선택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육상에 기인한 오염원인의 관측·감독을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4) 국가해양권의

○ (도서 및 영해 해양권익 강화) 다오위다오(钓鱼岛), 황옌다오(黄岩岛), 런아이자오(仁爱礁), 베이캉(北康) 및 난캉(南康) 암사 등의 지역에서 달성한 해양권익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해양권익옹호를 위한 법집행, 해양과학기술연구, 해저케이블파이프라인 관측·관리 및 과학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영해에서의 업무와 해양권익 보전에 중점을 둔다.

○ (남중국해 해양경계 문제에 적극 대처) 남중국해 해양경계선인 'Nine-Dotted Line(南海九段线)' 등의 문제에 대한 심층 논증 연구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필리핀에서 제기된 남중국해 해양경계 문제 중재 안전에 대응한다. 또한 제4회 대륙붕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동해, 남중국해 해양권익 옹호를 위해 역사적인 근거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다오위다오(钓鱼岛) 및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는 전문사이트 건설을 추진하며 대외홍보를 실시한다.

○ (국가관할권 이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글로벌 해양현황 평가보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양건강지수(海洋健康指数)' 이념의 국제적 시범과 홍보를 전개해 중국이 국제해양관련 규칙 제정시 견인역할을 강화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GOP)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해양 분야 주요 이슈 및 전망
- ▶ 중국 물류 동향

-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제조직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협력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역할을 발휘하여 '세계기후변화 및 예측가능한 연구프로젝트' 사무소, 아·태 해수담수화협회 사무소를 설립하고, 능동적으로 제2차 인도양과학탐사계획을 추진한다. 블루이코노미 지역협력파트너 네트워크 발전과 관련해 새로운 창의적인 의제를 제출하고 APEC에서 '해양 지속가능한 발전보고'를 발표한다. 남중국해 지역의 쓰나미 경보센터 설립 및 재해감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 연안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협력센터를 설립한다. 아·태지역 해양 관측평가센터, APEC 해양지속가능 발전센터 등을 중국 내에 유치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변국과의 해양협력외교 강화) 주변국과의 외교에 기반한 해양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제4회 APEC 해양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상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중국-아세안 해양협력 10주년을 기념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 동남아 국가와 정부 간 협력문서를 체결하여 심층적, 다차원적, 다자적 해양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동아시아에서도 해양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제2회 중국-아세안 해양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아세안 포럼, 해양유류오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장회의(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 등 양자 및 다자메커니즘에 참여한다.
해상안전 및 법 집행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해상문제 협상에 참여하여 해상 분야 법집행 관련 정보 교류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 연구한다. 중국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중국정부의 해양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해양국 해양국제협력상을 제정하여 해양정책에 공헌이 큰 외국전문가와 공무원에게 이를 수여하도록 추진한다.
- (해상 실크로드 건설 계획)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인도양 주변국가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한다. 「남중국해 및 기타 주변 해양국제협력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중국-파키스탄, 중국-스리랑카, 중국-잔지바르, 중국-모리셔스, 중국-말레이시아 등 인도양에서의 양자간 해양협력체제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인도양 주변 국가의 협력을 공고히 한다.
또한 태평양의 도서국가 및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피지, 통가,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가와는 기후변화, 도서보호, 해양자원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발전시킨다. 호주,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국가와는 해양과학 연구, 남극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한다. 해양대국과도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분야별로는 해양개발신기술, 과학연구, 환경보호, 해양관리 등 분야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이슈에 대해 협상을 전개한다. 국가별로는 중국-미국간 중장기 해양관측연구과학계획을 제정하고 중국-러시아 해양조사협력을 강화하며 중국-독일간 해양협력도 강화한다.

(5) 극지 및 북극해

- (극지전략 수립) 30차례의 남극과학탐사, 6차례의 북극과학탐사 등 극지에 대해 연간 정기적인 과학탐사를 실시한다. 극지전략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국제 극지이슈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책수립 연구를 진행한다. 중국-아이슬란드 간 극지 관측전망대를 건설하고 중국-북유럽극지연구센터를 설립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GOP)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해양 분야 주요 이슈 및
전망
- ▶ 중국 물류 동향

- (극지조사 강화) 선대 및 조사해역을 확대하여 조사를 더욱 공고히 한다. 대양을 대상으로 '해양 6호' 32항차, '해양 20호' 33항차, '대양 1호' 34항차, '상양 홍 9호' 36항차의 조사임무를 원만히 수행한다. 북서태평양과 서남인도양에 대한 자오룡호의 시험적 시범운행은 계속 진행하고, 동시에 자오룡호 응용메커니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운항업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다. 대양의 심해저 광구 구역 신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광구 탐사개발권을 신청한다.
- (국제공역에서의 방사능 관리) 국제 공역에서의 방사능 관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서태평양 해역의 해양환경 방사성 상태를 관측하는 정보체제를 구축하여 전면적으로 방사성 분포 및 확산 상황을 파악하여 각급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관측 정보정보를 발표한다. 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관측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선진화된 관측기술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연구 개발업무와 해양환경방사능 관측능력을 제고하고, 관측정보능력을 강화한다.

3. 2014년 전망

2014년 '전국해양공작회의'를 통해 살펴본 올 해 중국의 해양 분야 행보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법제도의 공고화이다. 특히 「국가해양사업발전 '13·5'계획」, 「전국해양경제발전 '13·5'계획」, 「극지고찰 '13·5'발전계획」 등 새로운 향후 5년간의 해양 분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원년이 될 전망이다.

둘째는 해양경제의 발전이다. 시장기반의 해양경제 발전을 제도화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유·무인도서 관리를 통한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할 전망이다. 셋째는 해양권익의 강화이다.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 문제에 대응하고, 영해 및 도서, 대륙붕과 EEZ 등 중국의 해양관할권 해역에서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넷째는 국제사회에서의 해양력 강화이다. 올해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제4차 APEC 해양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해양 이슈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응 의지를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가,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해양력을 대외적으로 적극 투사할 전망이다. 다섯째는 극지 해양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극지전략 수립을 통해 극지 탐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극지탐사선과 인프라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2014년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해양 분야에서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회방면에서는 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점진적인 추진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경제도약을 맞이하게 되며, 항공모함의 운영과 자오룡호 등의 운영을 통해 해양력 투사에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전방면에서 중국은 다오위다오, 남사군도, 황옌다오 등의 도서에 대해 일본, 필리핀 등 국가 간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전에 대응하느냐가 해양경제 발전을 통해 해양대국으로 나가려는 현 단계 중국이 2014년에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힌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GOP)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해양 분야 주요 이슈 및 전망
- ▶ 중국 물류 동향

칼럼 원문

2014年中国海洋产业主要热点问题与展望

一、2013年中国海洋热点问题回顾

1月,《国家海洋事业发展“十二五”规划》出台,对“十二五”时期海洋事业发展提出了总体要求,确定了指导思想、基本原则和发展目标。当月,国务院正式印发《全国海洋经济发展十二五规划》。1月17日,国务院正式批复《浙江舟山群岛新区发展规划》,这也是中国首个以海洋经济为主题的国家战略性区域规划。1月22日,菲律宾申请国际仲裁南海争端,中国拒绝回应。5月15日,北极理事会部长会议宣布,接受中国等6个国家成为理事会正式观察员国。7月3日,在国务院常务会议上原则通过了《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依据方案,上海自贸区规划为4块功能区域,范围包括上海外高桥保税区、上海外高桥保税物流园区、上海洋山保税港区和上海浦东机场综合保税区等4个海关特殊监管区域。7月22日,重新组建的国家海洋局挂牌,中国海警局同时挂牌,重新组建的国家海洋局由原先的国家海洋局及其中国海监、公安部边防海警、农业部中国渔政、海关总署海上缉私警察队伍和职责整合而成。11月26日,中国首艘航母“辽宁”舰从青岛某军港起航首次赴南海,并将在附近海域开展试验和训练。12月10日-13日召开的中央经济工作会议提出,要不断提高对外开放水平,建设21世纪“海上丝绸之路”。

二、2014年中国海洋热点问题

(一) 海洋战略规划和法制体系问题

2014年全国海洋工作会议指出:1、着重开展《国家海洋事业发展“十二五”规划》、《全国海洋经济发展“十二五”规划》中期评估,编制并发布全国海洋经济发展报告。开展《国家海洋事业发展“十三五”规划》、《全国海洋经济发展“十三五”规划》、《极地考察“十三五”发展规划》等专题预研工作,为规划编制奠定基础。开展大洋工作“十二五”规划执行中期评估,研究提出“十三五”规划框架和工作要点。2、积极推进《海洋基本法》、《深海海底区域资源勘探开发法》、《南极活动管理条例》等立法工作。全面推进“海洋督察制度”的实施,强化海洋行政管理和执法监督工作。加快完善海洋听证制度,提高科学民主决策水平。完善政府信息公开工作机制,加大政府信息公开力度。

3、继续加强国家海洋调查船队建设,加快推进极地破冰船、大洋综合调查船、载人潜水器支持母船、海洋综合科考船、海洋执法船的建造。加快推进南极新建站、国家深海基地建设。全力推进20艘新建海警船建造工作,确保按期下水入列。组织开展4型新购飞机委托管理服务采购工作,确保新购飞机技术培训、验收试飞和交付顺利开展。继续推进省级维权专用海监船、沿海渔政执法船及违规渔船扣押所建造工作。根据执法任务需求,制定装备设施统筹优化方案、装备配置标准和管理规定。启动新的大型、特型执法船舶飞机购建立项工作。进一步推进机构重组工作,加强海上执法队伍建设与管理。

(二) 海洋经济问题

2014年全国海洋工作会议指出:1、继续取消和下放审批事项,将国管项目用海和海底电缆管道的监督管理、填海项目竣工验收、临时利用无居民海岛审批、外商投资用岛审批等具体工作下放给地方或分局。2、构建海洋资源、资产和资本三位一体的管理机制,大幅减少政府对海洋资源的直接配置,破除海洋资源要素流动的体制机制障碍,促进海洋资源要素市场全面发展。出台全面推行海域使用权、无居民海岛使用权招标投标的政策,规范经营性用海、用岛使用权出让市场化工作。完善海域物权、产权交易等制度,规范海域使用权转让、抵押、出租二级市场,培育市场中介服务机构。深化海域使用权“直通车”制度建设,实现项目用海办理程序与基本建设程序的有机衔接。开展海域基准价评估,调整填海海域使用金征收标准,建立健全反映海域区位条件、生态价值、市场供求和资源稀缺程度的有偿使用制度。开展无居民海岛资源价值等别研究。做好海域、无居民海岛使用权统一登记发证工作,完善登记信息查询服务。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GOP)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해양 분야 주요 이슈 및 전망
- ▶ 중국 물류 동향

3. 联合中国人民银行出台海域使用权抵押贷款政策, 与中国银行签署促进海洋经济发展的战略合作协议, 会同国家开发银行印发开发性金融支持海洋经济发展的实施意见, 建立海洋经济项目库。鼓励成立涉海专业性金融机构、担保机构、保险服务机构, 积极创新金融工具, 为海洋产业发展量身定制特色化、专业化的金融产品。加快实施第二次海岛资源综合调查, 完成所有市级以下有居民海岛、近期拟开发的无居民海岛等2810个海岛的基础调查, 以及西沙群岛、中沙群岛的专项调查。争取各级政府支持, 拓宽海岛地区基础设施投入途径, 加大投入力度。

(三) 海洋综合管理问题

2014年全国海洋工作会议指出: 1、完善海洋资源监管体制, 健全海洋资源节约集约使用制度。建立海岸带综合协调机制, 实现海陆资源统筹与合理配置。健全海洋功能区划体系, 完成市县海洋功能区划编制报批工作, 探索区域性海洋功能区划编制试点。制订海岸线保护利用规划, 完善区域用海规划。完善养殖用海管理政策, 有效解决养殖海域整体粗放利用问题, 规范养殖海域占用征用补偿程序, 完善失海渔民多元补偿保障机制。落实国家宏观调控要求和国务院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意见, 严格实行围填海计划管理, 优先安排国家重点基础设施、产业政策鼓励发展类、民生领域项目用海指标, 限制高消耗、高污染产业在沿海布局。制定出台海域使用闲置处理办法, 建立海岛保护规划实施评价制度, 推进区域用岛规划管理, 加快法前用岛管理进程, 挖潜岛群开发优势, 加强海岛统筹互动, 吸引社会力量参与对海岛的保护和开发, 开展无居民岛集中统一管理和生态开发试点工作。建立海岛生态保护评价体系, 成立国家海岛生态建设专家委员会, 选建15-20个海岛生态实验基地, 使其形成海岛淡水供应、能源供给、垃圾污水处理等一揽子解决方案。

2、建立健全海域综合管控体系, 完善四级海域动态监测业务体系, 加强三沙市海域动态监视监测管理系统建设。推进海域无人机监测基地建设, 引进新型空间监测技术, 探索水下空间资源监测, 形成水上水下立体化监视监测体系, 对重点海域实施高频次监测, 对热点海域实现常态化监测。全面规范海域动态监视监测业务流程, 强化海域资源综合评价和决策支持, 建立海洋资源承载力监测预警机制。开展海籍调查试点, 推进海洋工程专项调查, 对海洋工程建设项目全过程监管, 探索重大项目用海后评估监测。建立大陆架及专属经济区人工构筑物建造使用管理制度。健全海岛监视监测数据采集、数据分析和应用服务机制, 推动国家海岛监视监测系统业务化运行。3、参与国家重大生态保护建设规划编制, 争取国家重大生态保护规划建设资金、海域使用金的支持, 加大海洋生态环境监控平台建设投入, 开展海洋生态环境监控体系建设。建立吸引海洋生态修复社会资本投入机制。强化海洋保护区、滨海湿地等重点生态区域的监测监视, 推进国家滨海湿地监测中心等重点项目和工程建设, 继续稳妥推进蓬莱19-3油田溢油事故生态修复工作。指导地方建立省级整治修复项目库, 统筹安排国家级项目储备工作。

4、坚持底线思维, 研究建立海洋生态功能区划制度, 在海洋生态重要区域、脆弱区域和敏感区域划定海洋生态红线。推进省市两级海洋生态红线划定技术研究及应用示范, 细化海洋生态红线监管措施, 继续推进渤海生态红线制度试点。对生态脆弱和敏感区域、海洋资源超载区域实施海洋工程区域限批, 在渤海试点经验的基础上向沿海各地区推广, 遏制海洋环境恶化趋势。5、健全海洋生态损害赔偿制度, 研究制定海洋工程项目建设生态补偿费征收办法, 推进海洋生态补偿试点, 建立对重点海洋生态功能区的补偿机制。构建上下游、陆海间污染补偿赔偿机制, 依据河流入海排放总量实现陆域排污向海洋纳污的补偿赔偿。在海洋经济发展试点省份的封闭或半封闭港湾开展总量控制试点, 建立健全渤海海洋环境污染治理陆海统筹机制, 将渤海海域污染物入海总量和减排目标按行政区划分解。选择部分地区开展入海河流断面考核监测, 加大陆源入海污染监测力度, 对渤海海、部分重点排污口邻近海域污染源排放, 实施动态监测和信息实时公开。

(四) 国家海洋权益问题

2014年全国海洋工作会议指出: 1、继续巩固钓鱼岛、黄岩岛、仁爱礁、北康和南康暗沙等海域专项维权执法成果, 积极做好定期维权巡航执法、涉外海洋科学研究、海底电缆管道监管以及科考护航等工作。全面推进领海基点保护范围选划工作, 切实维护领海基点安全。2、深入研究论证南海断续线等问题, 提出务实管用的解决方案。积极妥善应对菲律宾提出的南海仲裁案。主办第四届大陆架国际研讨会。系统研究东海、南海维权的法理和历史依据, 提出操作性强的综合措施, 开展钓鱼岛和南海问题专题网站建设, 及时应用于海上斗争和对外宣传。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GOP)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해양 분야 주요 이슈 및
전망
- ▶ 중국 물류 동향

3. 启动国家管辖海域以外生物多样性保护与可持续利用国家权益维护专项, 积极参与编写全球海洋状况评估报告, 开展“海洋健康指数”新理念的国际示范与推广, 增强中国在国际海洋规则制定中的引导作用。加大对国际组织的支持力度, 在区域合作中积极发挥主导作用, 承建“世界气候变率及可预测性研究项目”办公室、亚太脱盐协会秘书处, 主动谋划第二次国际印度洋科学考察计划。提出发展蓝色经济区域合作伙伴网络的新倡议, 发布APEC海洋可持续发展报告。制定国际组织在华机构发展规划。牵头实施南中国海区域海啸预警与减灾系统建设, 建设南中国海区域海啸预警中心、中国—东亚海海岸带可持续管理合作中心。加强亚太区域海洋仪器检测评价中心、APEC海洋可持续发展中心等工作机制建设, 提供品牌服务。做好全球海洋气象和气候资料中心的审议。

4. 落实周边外交工作会议精神, 进一步巩固完善周边海洋合作平台。办好APEC第四届海洋部长会议, 为领导人会议提供成果; 推动制定中国—东盟海洋合作十年行动倡议, 与柬埔寨、缅甸、文莱等国签署政府间合作文件, 建立深层次、宽领域、多伙伴的海洋合作平台。用好中印尼、中东盟海上合作基金, 稳步推进中印尼中心、中泰联合实验室的建设。建设东亚海洋合作平台, 召开第二届中国—东盟海洋合作论坛, 举办东盟地区论坛海洋溢油国际研讨会, 积极参与北太平洋海上执法机构论坛等双边和多边机制。加强海上安全和执法领域国际合作, 积极参与海上问题谈判与磋商, 探讨建立海上执法联络机制。着力培养知华友华力量, 办好第四届发展中国家海洋部长级研讨班, 实施好中国政府海洋奖学金, 设立国家海洋局海洋国际合作奖, 授予做出突出贡献的外国专家和官员。

5. 研究制定海上丝绸之路建设战略与规划, 推动海洋经济合作。巩固与印度洋周边国家现有的合作。大力推动《南海及其周边海洋国际合作框架计划》实施, 推进中巴(巴基斯坦)、中斯(斯里兰卡)、中桑(桑给巴尔)、中毛(毛里求斯)、中马(马来西亚)等海洋合作平台建设, 巩固拓展与印度洋周边国家的合作领域和空间, 树立合作典范。开拓与太平洋岛国及拉美国家的合作, 发展与斐济、汤加、瓦努阿图等太平洋岛国在应对气候变化、海岛保护、海洋资源开发的合作, 推动与澳大利亚、智利、巴西、阿根廷在海洋科研、南极考察等领域的合作。深化与海洋大国互利合作。加强在海洋开发新技术、科研环保、海洋管理等领域合作, 开展国际热点问题对话磋商, 制定中美大尺度中长期海洋观测研究科学计划, 深化中俄海洋调查合作, 启动中德海洋重大合作计划。

(五) 极地、大洋问题

2014年全国海洋工作会议指出: 1. 组织实施第30次南极科考、第六次北极科考、北极黄河站年度科考任务。完成泰山站主体工程建设任务, 完成罗斯海地区常年站地质勘测、全面环境影响评价、概念设计等工作。实施昆仑站后续建设任务, 完成长城站、中山站能力建设改造和验收工作。组织实施国家极地专项、极地国家战略利益评估专题等。开展极地战略与政策研究, 加强国际极地热点问题跟踪和对策研究。建设中冰极光观测台, 建立中国—北欧北极研究中心。

2. 进一步巩固多船多海域调查格局, 组织好“海洋六号”船执行大洋32航次、“海洋二十号”船执行大洋33航次、“大洋一号”船执行大洋34航次、“向阳红九号”船执行大洋36航次的调查任务。在西北太平洋和西南印度洋继续开展蛟龙号试验性应用航次, 同时摸索开放、共享的蛟龙号应用机制, 为业务化运行奠定基础。开展矿区申请主体研究, 适时提出中国新矿区的申请主张。3. 继续加强国际公共水域的放射性监测, 建立西太平洋海域海洋环境放射性常态化监测预警机制, 全面掌握放射性核素分布和迁移扩散状况, 及时向各级人民政府及社会公众发布监测预警信息。完善西太海域监测预警数据库建设, 深化先进监测技术研发应用, 加大“海洋放射性铯现场监测设备”推广应用力度, 加强在线监测等技术研发工作和对地方海洋环境放射性监测能力建设的帮助指导, 提高监测预警能力。

三、展望

2014年, 中国在海洋领域可谓机遇和挑战并存。在机遇方面, 随着上海自贸区的逐步推进, 中国面临着新一轮的经济飞跃, 而海洋恰好位于中央, 并且在航空母舰的运营和蛟龙号潜水等领域也会有进一步发展; 而在挑战方面, 中国就钓鱼岛、南沙群岛、黄岩岛等岛屿与日本、菲律宾等国具有争议。如何在积极应对挑战的前提下继续大幅发展海洋经济是中国所面临的难题。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중국 해양총생산(GOP)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해양분야 주요 이슈 및 전망
- ▶ 중국 물류 동향

중국 물류 동향

경제 · 정책

- 상하이 자유무역구 서비스업 확대 개방 예상
- 2014년 중국 중앙정부 예산 발표, 교통운수 부문 지출 전체의 5.1% 차지
- 중국 장강 경제벨트 건설,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 광시자치구, 베이부완(北部湾) 자유무역항 건설 주장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건설 홍콩에 긍정적 효과
-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완성, 기초산업 강화 제시
- 2014년 중국 자동차 가격 하향조정 추세
- 올해 들어 중국 수입철광석 가격 큰 폭 하락
- 중국, 금년 보일러·석유화학산업 등 오염물 배출기준 제정 계획
- 2013년 “중치세 개혁” 세수절감규모 1,400억 위안 이상

해운 · 항만

- SISI, 「2013년 세계항만 발전보고」 발표, 세계 컨테이너 항만간 경쟁 심화
- 중국 연해 운송력 긴장 국면에서 연해 석탄 운임 상승 가속화
- 국무원, 저장성 윈저우(温州)항 확대 개방 승인, 국제항로 개설 및 선사 유치에 용이
- 광둥 산터우(汕头), 석탄환적기지 1기 공정 준공 임박

- 샤먼항, 샤먼-광둥성 차어쩌우(潮州) 물류 통로 금년 착공 계획
- 2013년 장수성 항만물동량 최초 20억 톤 돌파
- 텐진항, “이름다운 항만 건설 액션플랜” 발표
- 허베이 항만건설 가속 올해 17개 선석신설 계획
- 머스크 1.8만 TEU 컨테이너선 샤먼항 기항
- 광둥성 50억 위안 투자, 베이장(北江) 천 톤급 항로 건설 계획

종합 물류

- 충칭 “위신오우(渝新欧, 충칭~유럽)” 철도 노선, 4월부터 매주 2회 운행
- 동북 3성, 성간 도로 공동 계획 건설 추진
- 국가발전개발위원회, 칭다오~렌잉강 철도건설 비준, 건설 기간 4년 예상 비준
- 2013년 중국 사회물류총비용 10조 위안, 물류원가 여전히 높은 수준
- 중국 362개 “시 우정국(邮政局)”, “우정 분공사”로 개명
- “중싱(中兴)닝보 글로벌공급체인관리센터, Ningbo보세구에 착공
- 교통운수부, 「도로운송산업 집약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상하이철도국, 북경~상하이 고속철도 택배 업무 개시 계획
- 금년 4월 1일부터 한-중 AEO 상호인정 협약(AEO MRA) 전면 실시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